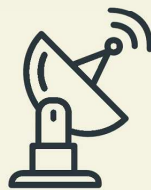


헌법불합치

#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일시  
장소  
주최

2019년 9월 18일(수)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

# 순서

3:00 ~ 3:05	개회	
3:05 ~ 3:10	인사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 은평갑)
	사회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3:10 ~ 3:35	발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3:35 ~ 4:00	발제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대안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4:00 ~ 4:40	토론	오지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상준   법원 행정처 사법지원실 전철호   법무부 공공형사과
4:40 ~ 5:00	전체토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의 노력의 결실로 마련됐습니다. 토론회 주최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디지털 플랫폼 경제 등이 강조되고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연계와 유통 과정에서 통신의 비밀과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에 얽매어 디지털 시대의 통신비밀 보호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정보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촛촛하지 못한 현행법으로 인해 정보수사기관의 불법 감청과 광범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대한 제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통신수사에 대한 2018년도 세 가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이제 우리는 대안입법 마련 시한 도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현행법의 한계를 직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는 올바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해 오늘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양홍석 변호사님과 이호중 교수님, 토론자로 참석하신 오지현 변호사님과 전현욱 연구위원님, 법원행정처의 윤상준 사무관님과 법무부의 전철호 검사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랫동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양홍석

|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1.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가.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09헌가30 결정

- <통신제한조치 무제한 연장> 사건

#### 1) 사안의 개요

- 이○재, 이○원과 최○아는 각각 북한 노동당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인 통일범민족연합의 남측본부 의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2009. 6. 24.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제6조), 찬양·고무죄(제7조)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그 연장허가를 통하여 수집한 이메일, 녹취자료(전화녹음), 팩스자료 등을 신청하였음.
- 이에 제청신청인들은 위 증거자료들 대부분이 총 14회(총 30개월)에 걸쳐 연장된 통신 제한조치를 통하여 수집된 것으로서 이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단서가 적법절차, 영장주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청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2009초기3876)을 하였고, 제청법원이 2009. 11. 27.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음.

## 2) 심판대상

위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부분

## 3) 주문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 4) 이유

### ① 침해의 최소성 위반(적극)

“통신제한조치기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통신의 비밀보호에 비추어 인정되는 불감청수사원칙의 예외로 설정된 기간이고,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예외에 대하여 다시금 특례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되므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 최소한의 연장기간 동안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다면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거나 범죄혐의가 있어도 그 입증수단이 과도한 것으로 보아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여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이 최소한의 연장기간 동안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게 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통신제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새로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수사목적 달성에 충분하다. 이렇게 통신제한조치가 연장될 수 있는 총기간이나 연장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이 허가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개인의 통신의 비밀을 덜 제한하면서도 충분히 수사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물론 통신제한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받아야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서도 법원이 그때그때 사안을 고려하여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이 남용되는 것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이 남용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동일한 범죄사실에 하여 새롭게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등 기간연장허가의 청구절차에 비하

여 더욱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바(법 제6조 제4항), 통신제한조치를 새롭게 청구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완화된 절차로 통신제한조치를 계속하기 위하여 기간연장의 허가를 청구함으로써 기간연장제도를 남용할 경우 법원은 기간연장절차에 따른 심사를 하는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실제로 기간연장을 심사함에 있어서 일단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된 이후에는 계속되는 기간연장의 청구가 기각되는 일이 실무상 매우 드물다는 사실은 기간연장의 청구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방증해 준다. 더구나 이 사건처럼 기간연장청구의 남용을 스스로 통제하여야 할 법원이 그 남용가능성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적으로 기간연장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압수·수색영장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범죄에 관련된 증거의 수집 등을 위하여 행해지는 대물적 강제처분이라는 점 및 강제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상관없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에서 통신제한조치와 유사하고, 이러한 유사점에 비추어 양자에 대한 법원의 통제정도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감청 당시에 개인이 감청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의 사실을 고지 받고 시행되는 압수·수색의 경우보다 오히려 그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의 기각률은 압수·수색영장청구의 기각률보다 현저하게 낮으며,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청구의 기각률은 통상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의 기각률의 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실무를 고려해 보더라도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청구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실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절차의 남용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이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에 사법적 통제절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남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통신의 비밀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법운용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계속해서 통신제한조치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성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② 법익균형성 위반(적극)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불감청수사원칙의 예외에 대하여 다시금 특례를 설정하여 주는 것인바, 이처럼 기본권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예외의 범위를 확장할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공익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상

충되는 긴장관계의 비례성 형량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통신제한조치가 내려진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자신이 감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본권제한의 특성상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횡수나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가 심히 크고, 나아가 피의자나 피내사자뿐만 아니라 그들과 전자적 방식으로 접촉한 제3자의 수사와 관련 없는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도 침해당할 우려도 심히 크다. 반면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수사목적은 일정한 연장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오히려 그러한 범죄혐의가 불필요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여전히 범죄혐의가 있다면 새로운 청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추구하고자 하는 범죄 수사목적에 비해 개인의 통신비밀의 보호 법익이 과도하게 제한되므로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550, 2014헌마357(병합)

- <실시간위치추적>사건

1) 사안

① 2012헌마191, 550 사건

- 이 사건 청구인들은 ○○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김○숙 등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취지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로,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에 해당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위 청구인들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음
- 이에 청구인 송○동, 정○우는 2012. 2. 29., 청구인 정○선, 김○진은 2012. 6. 19.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

## ② 2014헌마357 사건

- 이 사건 청구인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무 방해혐의로 기소되거나, 동일한 이유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에는 이르지 않은 사람 등으로,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위 청구인들은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음
- 이에 위 청구인들은 2014. 5. 2.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

## 2) 심판대상

- [정의조항]  
통신비밀보호법(2005. 1. 27. 법률 제73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1호<sup>1)</sup> 바목, 사목
- [요청조항]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 [허가조항]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 본문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관한 부분

- [통지조항]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관한 부분

### 3) 주문

- [요청조항, 통지조항]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 [허가조항]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 본문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정의조항]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4) 이유

#### ① 요청조항

-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소극)

– 요청조항 중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의미가 불분명해서 명확성 원칙 위배되는지

“이 사건 요청조항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위치정보 추적자료가 범인의 발견이나 범죄사실의 입증에 기여할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된다는 전제 하에, 범인을 발견·확보하며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위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련 있는 자에 대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침해의 최소성(적극)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정보주체인 전기통신가입자가 이동전화 등을 사용하는 때에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정보주체가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사적 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제공될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특정 시간대 정보주체의 위치 및 이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정보주체의 예상경로 및 이동목적지 등을 유추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정보주체의 현재 위치와 이동상황을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비록 내용적 정보가 아니지만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요청조항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을 요건으로 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한 피의자·피내사자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요청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요청조항은 수사기관이 범인의 발견이나 범죄사실의 입증에 기여할 개연성만 있다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만 있고 보충성이 없는 경우에도, 피의자·피내사자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요청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①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수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보충성이 있을 때, 즉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법, ②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 이외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보충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개선입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등을 통하여 수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 및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이 사건 요청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이면서도,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요청조항은 정보주체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을 도외시한 채 수사기관의 수사편의 및 효율성만을 도모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 ② 통지조항

### - 적법절차원칙 위배(적극)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므로, 정보주체로서는 그 사실을 통보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위치정보 추적자료가 어떤 절차와 내용으로 제공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구조이다 … 수사의 밀행성 확보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적절한 고지와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과 관련하여, 사전에 정보주체인 피의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는 것은 수사의 밀행성 확보를 위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은 다음에는 수사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제공사실 등을 정보주체인 피의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함으로써, 피의자 등은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위치정보 추적자료가 제공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 또는 제공된 위치정보 추적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보주체인 피의자 등은 이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실효성 있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수사·내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는 그 기간이 아무리 길다 하여도 자신의 위치정보가 범죄수사에 활용되었거나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통지조항은 수사기관이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에 대해서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 등에 대해 사후통지를 받더라도 자신의 위치정보 추적자료가 어떠한 사유로 수사기관에게 제공되었는지 전혀 짐작할 수도 없다. 그 결과, 정보주체는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의 통지와 관련해서는, 실제적 진실발견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면서도 피의자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①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수사·내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수사·내사의 대상인 정보주체에 대해 이를 통지하도록 하되, 통지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사법부 등 객관적·중립적 기관의 허가를 얻어 그 통지를 유예하는 방법, ② 일정한 예외를 전제로 정보주체가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 사유의 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③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개선입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를 위한 적법절차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 ③ 허가조항(소극)

“이 사건 허가조항은 강제처분인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의 특수성, 이와 관련된 입법연혁과 수사현실,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의 특수한 형태로서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한 영장주의의 본질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인적·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중립적인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만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허가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헌법재판소 2018. 6. 28. 2012헌마538

#### - <기지국수사> 사건

##### 1) 사안

- 2011. 12. 26. 서울 서초구 ○○동에 있는 ○○회관에서 ○○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과정 중 성명불상자의 선거인들에 대한 금품살포 의혹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었다. 수사에 착수한 피청구인은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자료를 확인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이동전화로 통화하는 시각에 기초하여, 2012. 1. 25. 18:10경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2011. 12. 26. 17:00부터 17:10 사이 ○○회관을 관할하는 기지국을 이용하여 착·발신한 전화번호, 착·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발신 번호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였고,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총 659명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았음
- 청구인은 인터넷 언론의 기자로서 위 시각에 ○○회관에서 ○○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취재하였는데, 2012. 3.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을 통지받아 위 수사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위 수사 및 그 근거조항인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

## 2) 심판대상

- [기지국수사 행위]

피청구인이 2012. 1. 25. 18:10경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2011. 12. 26. 17:00부터 17:10 사이 ○○회관을 관할하는 기지국을 이용하여 착·발신한 전화번호, 착·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발신 번호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위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총 659명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행위

- [요청조항]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 [허가조항]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 본문 중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관한 부분

## 3) 주문

- [요청조항]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 [허가조항]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 본문 중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 [기지국수사 행위]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4) 이유

##### ① 기지국수사 행위(각하)

“이 사건 기지국 수사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요청조항 및 허가조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기지국 수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중국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만으로 광범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허가조항의 위헌성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지국 수사와 유사한 기본권 제한의 반복 가능성은 결국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이 사건 요청조항 및 허가조항이 현존하기 때문이며,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요청조항 및 허가조항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취지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요청조항 및 허가조항의 적법요건을 인정하여 그 위헌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이 사건 기지국 수사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지국 수사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② 요청조항

###### - 침해의 최소성(적극)

“기지국 수사의 허용과 관련하여서는, ① 유괴, 납치,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같이 피해자나 피의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② 위 중요 범죄와 더불어 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 일반을 포함시키는 방안, ③ 위 요건에 더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수사가 어려운 경우(보충성)를 요건으로 추가하거나, 또는 위 중요 범죄 이외의 경우에만 보충성을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 ④ 1건의 허가서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독립적 또는 중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요청조항은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모든 범죄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의혹만으로도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불특정 다수의 통신사실 확인자

료를 제공받는 수사방식을 허용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 ③ 허가조항(소극)

“이 사건 허가조항은 기지국 수사의 필요성, 실체진실의 발견 및 신속한 범죄수사의 요청,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특성, 수사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받아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장주의의 본질이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인적·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만 한다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허가조항은 실질적으로 영장주의를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

라.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263

#### - <인터넷회선 감청>(패킷감청) 사건

##### 1) 사안

- 국가정보원장은 청구인 김○윤의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수사를 위하여 위 김○윤이 사용하는 휴대폰, 인터넷회선 등 전기통신의 감청 등을 목적으로,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35차례의 통신제한조치를 허가받아 집행하였다. 위 통신제한조치 중에는 ‘○○연구소’에서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주식회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인터넷회선(서비스번호: ○○○○, ID : ○○○○)에 대한 2013. 10. 9.부터 2015. 4. 28.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행해진 통신제한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인터넷 통신망에서 정보 전송을 위해 쪼개어진 단위인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수사기관이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감청’이었음.
-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위 인터넷회선의 감청을 목적으로 하는 6차례의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의 허가, 이에 따른 피청구인 국가정보원장의 감청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제5조 제2항, 제6조가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

##### 2) 심판대상

- [법원의 허가]  
‘○○연구소’에서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주식회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인터넷회선(ID :

○○○, 이하 ‘이 사건 인터넷회선’이라 한다)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허가한 2013. 10. 8.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허가번호 2013-8526)를 포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인터넷회선에 대한 총 6회의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

- [감청집행]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청구인 국가정보원장이 2013. 10. 9.부터 2015. 4. 28.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감청한 행위

- [근거규정]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

### 3) 주문

- [근거규정]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 [법원의 허가, 감청집행]

각하

### 4) 이유

#### ① 법원의 허가(소극)

“이 사건 법원의 허가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소송절차 이외의 파생적 사항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3. 10. 9.부터 2014. 6. 16.까지 251일 중 8일을 제외한 243일 동안의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별지 기재 순번 1번에서 4번까지의 법원의 허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 2011. 12. 31.을 시한으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취지(헌재 2010. 12. 28. 2009헌가30)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법원의 허가는 동일한 청구사유에 대해 법원이 단순히 통신제한조치의 기간만을 연장해준 것이 아니라 검사가 매 청구시마다 통신제한조치가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고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새로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원의 허가는 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새로운 통신제한조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허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② 감청집행(소극)

“청구인이 중국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회선 감청은 그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조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여 필요 이상으로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수사기관에 의한 남용의 우려가 높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감청집행과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 가능성은 결국 인터넷회선 감청 또한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존하기 때문이며, 이에 청구인도 법 제5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 취지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요건을 인정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이 사건 감청집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근거규정

### - 침해의 최소성(적극)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 감청은 수사기관이 실제 감청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불특정 다수인의 모든 정보가 패킷 형태로 수집되어 일단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송되므로,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하여 감청 집행을 통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방대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회선 감청은 법원으로부터 감청 허가를 받은 특정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되는 패킷들이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송·수신 도중에 수집·복제되어 수사기관에 전송·저장되고, 수사기관이 이들 패킷에 대해 재조합 기술을 거쳐 그 내용을 지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법원으로부터 인터넷회선 감청 허가를 받은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인터넷회선에 고정 IP를 부여한 다음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하나의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러 사람이 하나의 인터넷회선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공유기 또는 분배기 같은 기기를 통해서 특정 인터넷회선의 이용자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기관 내에서 사설망(LAN)

을 운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인터넷 접속 시마다 사설 IP를 공인 IP로 변환시켜 주는 시스템(Network Address Translation, NAT)을 작동시켜 하나의 IP만을 이용하기도 하므로, 감청대상자인 피의자 내지 피내사자가 미리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설망을 사용하는 사람의 통신 정보가 수사기관에 모두 수집·보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수사기관에 수집·보관된 막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이 재조합 기술을 거쳐 직접 열람하기 전까지는 감청대상자의 범죄 관련 정보만을 구별해내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결국 인터넷회선 감청은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단계에서는, 특정 피의자 내지 피내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특정 인터넷회선을 이용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 중 범죄 관련 정보로 감청 범위가 제한되어 허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감청 허가서에 기재된 피의자 내지 피내사자의 통신자료뿐만 아니라 단순히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할 뿐인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자료까지 수사기관에 모두 수집·저장되므로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해 취득하는 개인의 통신자료의 양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할 수 있다.”

“범죄수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터넷회선 감청이나 그와 유사한 형태의 전기통신감청을 허용하면서도, 이러한 종류의 감청을 통해 수사기관이 취득하게 되는 자료의 양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기본권을 덜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위법 내지 권한 남용을 방지 내지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입법례가 상당수 발견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전기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약칭 ‘ECPA’라 한다)에서 중대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감청을 규율하고 있는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감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감청집행에 관한 경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감청 종료 직후 감청자료를 감청을 허가한 판사에게 봉인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감청자료의 보관 내지 파기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청 종료 후에 판사가 당사자에게 감청집행 사실을 통지하며, 감청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위법이나 감청자료의 공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전기통신감청이 규율되고 있는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청을 집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에서 허가한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감청을 지체 없이 종료하고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법원은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의 중단을 명할 수도 있다. 감청 종료 후에도 수사기관은 감청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감청집행결과 사적인 생활형성의 핵심적 영역으로부터 인지한 사실임이 확인되면 그 사용이 금지되고, 해당 기록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감청집행사실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때로부터 2주 내에 법원에

감청의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역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방수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전기통신감청을 실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감청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때에 입회인이 봉인한 기록매체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해당 통신감청처분을 취소하고, 범죄와 무관하거나 감청에 위법이 있는 경우 기록을 삭제하도록 사후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는 자신이 어떠한 내용의 감청을 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 감청 기록 및 원기록 중 통신의 청취·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통신감청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우리 법은 법원의 허가 단계에서는 법이 정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을 구비하여(법 제5조 제1항) 피의자,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목적, 대상, 범위, 집행 장소, 기간 등을 특정하여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법 제6조), 집행 단계부터는 앞서 본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의무 및 일정 목적 외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을 정한 것 외에 객관적 통제장치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일례로서 현행법상 감청의 집행 통지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 사유를 제외하고 집행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시간만을 통지하게 되어 있어(법 제9조의2), 집행 통지를 받더라도 무슨 사유로 감청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고,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기소중지 처리되는 경우에는 감청이 집행된 사실조차 알 수 있는 길이 없는바, 이러한 통지 제도는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 수단의 부재와 결합하여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인한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정도를 가늠하기조차 어렵게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의견은 법상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의무, 정해진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 외에, 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해당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및 관련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함에도, 이러한 의무조항과 제재조항을 두고 있는 것만으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나 관련 기본권 침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상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

이 된 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외에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도 사용이 가능하므로(법 제12조 제1호), 인터넷회선 감청이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애당초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2.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드러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 가. 법원의 ‘허가’절차 설계상 한계

#### ① 〈통신제한조치 무제한 연장〉 사건

이 사건에서 검찰총장은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법원이 허가하도록 하여 기간연장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 이상 대상 범죄별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연장횟수를 달리할 필요는 없고 대상범죄별로 연장기준을 달리 선정할 경우 오히려 새로운 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경찰 단계에서부터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여도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만 할 수 있을 뿐 법원에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라는 점, 통신제한조치 기간,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이 재청구보다 요건이 비교적 간단하여 재청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하나 실무관행상 연장청구시 연장사유 등도 별도로 기재하고 있는 등 그 요건, 절차상에서 양자의 실질적인 차이는 전혀 없다는 점, 기간연장의 횟수제한이 없으면 사실상 무제한적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 법원의 허가제 등 엄격한 절차규정을 두고 통제하고 있는 이상 제도 운영상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다. 즉, 통신제한조치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연장청구시에도 연장청구사유를 법원이 ‘심사’하므로 통신제한조치 기간이나 횟수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사법적 심사로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통신제한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받아야 하는 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서도 법원이 그때그때 사안을 고려하여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이 남용되는 것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이 남용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동일한 범죄사실에 하여 새롭게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등 기간연장허가의 청구절차에 비하

여 더욱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바(법 제6조 제4항), 통신제한조치를 새롭게 청구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완화된 절차로 통신제한조치를 계속하기 위하여 기간연장의 허가를 청구함으로써 기간연장제도를 남용할 경우 법원은 기간연장절차에 따른 심사를 하는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판시해 현행 제도에서는 통신제한조치 재청구와 기간연장이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기간연장의 경우 법원의 ‘허가’가 적절한 통제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허가’절차가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법익균형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요건’이 필요하고 이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의 허가는 기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절차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최초의 통신제한조치에 따라 증거를 수집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불감청수 사원칙의 예외로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된 것인데 통신제한조치가 증거수집 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은 재연장이 거듭될수록 증폭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의문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절차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이 판단한 데에는 그동안 법원이 통신제한조치 연장을 쉽게 해줬던 ‘관행’이 존재하고 이 ‘관행’을 법원이 스스로 요건의 엄격한 해석·적용하는 노력하는 것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사실 통신제한조치 연장시에도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이 존속해야 하는 한계(법 제6조 제7항 단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통신제한조치 연장을 관대하게 인정해 왔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기간연장을 심사함에 있어서 일단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된 이후에는 계속되는 기간연장의 청구가 기각되는 일이 실무상 매우 드물다는 사실은 기간연장의 청구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방증”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이를 단순히 제도 ‘운용’의 문제를 넘어선 제도 ‘설계’상 한계로 본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사안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허가’ 등의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통제가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문제없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고, 이 사안과 같이 ‘허가’ 등의 절차가 있음에도 그 ‘허가’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둘을 가르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소위 ‘실무관행’이 오랫동안 정착된 경우 그것은 단순히 ‘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상 한계로 접근하는 것이 기본권보장의 가능성을 넓히는 접근방법이고,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통신비밀보호와 관련해서 ‘허가’제도가 갖는 근본적 한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 ②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통신제한조치 무제한 연장〉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허가’ 절차가 갖는 근본적

한계에 주목했는데, 이런 접근이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에서도 반복된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요청조항이 수사의 필요성만을 규정하고 보충성 등의 요건이나 대상범죄를 제한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 관련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은 일정부분 통제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수사절차에서 요건이 엄격한 통신제한조치의 활용은 점차 줄어드는 대신 상대적으로 요건이 완화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활용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은 약 4%인데 반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은 약 1%에 불과한데, 이는 이 사건 요청조항이 보충성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원인이 있다.”

### ③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재판소는 <기지국수사> 사건에서도 법원의 ‘허가’가 제대로 기본권보장을 위한 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물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요청조항이 기지국 수사에 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기지국 수사로 인한 남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의 거의 대부분은 기지국 수사 방식에 의한 것이며 1개의 허가서 당 수천여 개의 전화번호가 집계되고 있는 실정인 점,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은 약 4%인데 반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은 약 1%에 불과한바, 이는 이 사건 요청조항이 보충성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기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법원이 허가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제공 요청 남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④ <인터넷회선 감청> 사건

“감청대상자인 피의자 내지 피내사자가 미리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설망을 사용하는 사람의 통신 정보가 수사기관에 모두 수집·보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수사기관에 수집·보관된 막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이 재조합 기술을 거쳐 직접 열람하기 전까지는 감청대상자의 범죄 관련 정보만을 구별해내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결국 인터넷회선 감청은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단계에서는, 특정 피의자 내지 피내사자

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특정 인터넷회선을 이용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 중 범죄 관련 정보로 감청 범위가 제한되어 허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감청 허가서에 기재된 피의자 내지 피내사자의 통신자료뿐만 아니라 단순히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할 뿐인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자료까지 수사기관에 모두 수집·저장되므로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해 취득하는 개인의 통신자료의 양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검토한 3건에서는 ‘허가’절차가 그동안 운용되어온 관행에 따른 근본적 한계에 주목했는데, <인터넷회선 감청>사건에서는 기술상 한계에 따라 인터넷회선 감청방식을 택할 경우 법원의 ‘허가’단계에서 설정한 제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했다. 법원이 ‘허가’단계에서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집행단계)에서 그 통제가 작동할 수 없는 이상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를 ‘허가’절차의 한계로 본 것이다.

## ⑤ 소결론

헌법재판소는 <실시간위치추적>사건, <기지국수사>사건에서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인적·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허가’를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허가’절차의 한계를 ‘침해의 최소성’ 위반으로 구성했다.

이는 법원의 ‘허가’ 절차가 실질적으로 기본권보장 및 기본권최소침해에 기여해야 하고, 향후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허가’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고 이를 위해 그동안의 실무운용례, 실무관행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

## 나.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 1) 통신내용과 통신외형 구별론 극복

헌법재판소는 <실시간위치추적> 사건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통신으로 발생하는 외형적인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계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시간·통신장소·통신횟수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기지국수사> 사건에서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

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긴 하지만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므로, 기지국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 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의 자유영역으로 엄격하게 보호되는 “통신내용” 외에 통신외형(비내용적 정보) 역시 통신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통신내용과 통신외형(비내용적 정보)의 구별을 유지하면서도 양자의 보호수준을 사실상 동일하게 하도록 주문해 실질적으로는 이런 구별론이 더 이상 의미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밝힌 것이다.

## 2) 절차의 엄격함과 기본권보장 수준

기본권제한을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그 공권력 발동요건, 행사절차, 행사 이후 절차를 엄격할수록 기본권제한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그만큼 기본권보장의 수준을 높아진다. 헌법재판소도 위 사건들에서 다양한 개정방향을 제시했는데 그 방향은 대체로 통신비밀을 제한하는 절차적 요건의 추가·강화이고 이는 절차의 엄격함을 통해 기본권보장 및 기본권 침해최소화로 나아가라는 것이다.

### ① 통신제한조치 연장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제안

헌법재판소는 “최소한의 연장기간 동안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게 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통신제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새로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수사목적 달성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소한의 연장기간’을 전제하고 있는데, ‘연장’도 그 전 통신제한조치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었거나 얻지 못했거나 그 시점 이후에 통신제한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심리해서 허가해야 한다는 제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재청구’와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연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매번 청구시점에 장래를 향해 일정한 기간동안 통신제한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연장’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 운용에서 다를 바 없고, 만약 좀 더 완화된 형태의 ‘연장’을 인정한다면 최초 통신제한조치 ‘허가’가 “1회”를 전제한 것임에

도 이후에 그 전제가 바뀌었음에도 종전 판단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결과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 ②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제안

헌법재판소는 〈실시간위치추적〉 사건에서 “①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수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보충성이 있을 때, 즉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법, ②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 이외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보충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법은 단순히 현행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서 “범죄실행저지”, “범인 발견·확보”, “증거수집·보전”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위치정보추적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위치정보추적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소위 ‘보충성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방법은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사의 필요성만으로 위치정보추적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보충성요건을 추가하자는 방안이다.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방안 모두 현행 제도보다 기본권제한의 절차를 엄격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므로 ‘수사의 필요성’ 요건(현행과 같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도로 광범위하게 설정된 경우)만으로는 실질적인 절차통제규정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보충성 요건” 역시 법원이 수사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다른 방법이 동원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충성 요건”이 통제절차로 기능하려면 법원의 적극적인 법해석과 적용이 필요한데 법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없고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한 허가절차가 운용된 관행에 비춰보면 역시 수사기관의 판단과 재량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치정보추적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

상범죄를 제한하는 방식이 현실적이고, 여기에 “보충성 요건”을 그야말로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가 〈기지국수사〉 사건에서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지국 수사의 허용과 관련하여서는, ① 유괴, 납치,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같이 피해자나 피의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② 위 중요 범죄와 더불어 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 일반을 포함시키는 방안, ③ 위 요건에 더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수사가 어려운 경우 (보충성)를 요건으로 추가하거나, 또는 위 중요 범죄 이외의 경우에만 보충성을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 ④ 1건의 허가서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독립적 또는 중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제안은 현행 제도에서 도입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기본권보호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는 원론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이 제안에서도 역시 “보충성 요건”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것만으로 절차통제가 완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대상범죄를 한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통지제도 개선

헌법재판소는 〈실시간위치추적〉 사건에서 “예를 들면, ①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수사·내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수사·내사의 대상인 정보주체에 대해 이를 통지하도록 하되, 통지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사법부 등 객관적·중립적 기관의 허가를 얻어 그 통지를 유예하는 방법, ② 일정한 예외를 전제로 정보주체가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 사유의 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③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개선입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현행 통지제도는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수사·내사가 계속될 경우에는 아예 통지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법원에 의한 통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기간(혹은 즉시)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재 다른 통지도 완벽하게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징계책임 등을 묻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정보주체가 직접 통지를 신청하는 방법은 수사기관의 통지제도 전반을 손보는 것과 다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정보주체가 자신이 이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게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존재한다.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로서는 당해 수사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지유예상태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 물론 전반적인 통지제도를 손보면서 해당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업자에게도 수사기관이 수사상황, 통지유예상황 등을 알려주고 정보주체의 청구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인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 번 통지를 해야 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프라이버시 침해위험이 증가하는 것이고 실무상 혼선·비효율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제공을 제외하는 것 역시 개인정보관리통제권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과 맞지 않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제3자 제공내역 열람과 관련해서는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하되 수사기관에 대한 제공내역은 일정기간(예컨대 3개월) 열람권을 제한하고 그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제공내역도 사업자가 정보주체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인터넷회선 감청제도 개선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 감청〉 사건에서 해외 입법례를 소개하면서 집행과정에서의 통제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한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체계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지득하는 감청 외에는 압수·수색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회선 감청은 “대상자”의 “범죄” 관련 정보를 특정해서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진보없이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터넷회선 감청이 압수·수색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고, 근본적으로 그 회선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모든 정보 외에 제3자의 모든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저장·분석할 수밖에 없는 인터넷회선 감청이 강제처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어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기술발전정도에서 인터넷회선 감청은 인류가 사용할 수 없는 단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용하도록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 □

##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입법 대안

이호중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 주요 내용

#### 1. 형식

- 전면개정안 형식

#### 2. 감청

##### 1) 감청 요건

- 대상범죄를 현행 통비법보다 축소
- 대상범죄의 요건에서 “계획” 및 “피내사자” 삭제
- 보충성 요건 강화(“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2) 패킷감청에 대한 통제

- 패킷감청은 엄격하게 예외적으로만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감청의 경우 감청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역무 또는 인터넷서비스의 종류·유형을 특정하도록 하고, 인터넷회선감청은 그러한 기술적 특정·분리조치가 불가능하고 개별적인 감청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엄격하게 한정

### 3) 집행 통제

- 사생활에 관한 정보 수집시 즉시 폐기 또는 삭제하고 이를 기록에 남기도록 규정
- 감청 집행시 기록매체 저장 + 집행종료 시 봉인하여 법원에 제출  
→ 법원이 원본을 보관하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신청하여 수사상 필요한 부분 복사
- 봉인한 기록매체 원본의 10년간 보존의무 /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기록매체 원본의 폐기 여부 결정

### 4) 통지제도 및 당사자 권리보호

- 감청 집행종료시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 + 통지유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며 30일로 제한
- 통지받은 당사자는 법원에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 청구 + 법원에 해당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신청

## 3. 가입자정보의 제공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통신자료’를 ‘가입자정보’로 변경하고, 통비법에서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 영장의 요건은 형소법상의 일반 압수수색(형소법 제106조)과 동일한 요건 적용

## 4.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

### 1) 통신사실확인자료 일반

- 감청대상범죄(+전기통신 이용범죄) + 감청의 요건 적용

### 2)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

- 감청대상범죄보다 대상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축소(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참조)
- 보충성 요건에 관해서는 감청 요건(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을 동일하게 적용
-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 기간을 원칙적으로 10일로 제한(단, 10일씩 2회 연장 가능)

### 3) 기지국수사

- 대상범죄는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의 대상범죄와 동일하게 규정
- 요건은 연쇄범죄 발생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

## 5. 가입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시 당사자에 대한 통지제도 강화 및 심사청구권 보장

-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 + 통지유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며 30일로 제한
- 통지받은 당사자는 법원에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 청구 + 법원에 해당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신청 □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조문(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비고
<u>&lt;장 제목 신설&gt;</u>	<u>제1장 총칙</u>	
<b>제1조(목적)</b>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b>제1조(목적)</b>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그 제한의 대상 및 법적 절차 등을 엄격하게 한정함으로써 통신비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를 명시함 - 전해철안(2016.8.2. 발의)과 동일한 취지로 문구를 조정함.</li> </ul>
<u>&lt;신설&gt;</u>	<b>제2조(기본이념)</b> 이 법을 해석·적용·집행할 때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범죄 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등 목적과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권제한은 필요최소한도로 그쳐야 한다는 점, 특히 범죄혐의와 무관한 피의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함(전해철안과 동일한 취지).</li> </ul>
<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성·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b>제3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4. (현행과 동일) <u>&lt;삭제&gt;</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 개념정의(현행 제5호)는 현행 통비법 제7조에서 통신 당사자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인 경우를 구별하여 절차를 달리 규율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문이나, 개정안 제8조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을 없앴으므로 제5호는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임.</li> <li>■ 감청을 ‘대화 감청’과 ‘전기통신 감청’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전기통신 감청의 경우 “송·수신 중인”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함을 분</li> </ul>

<p>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p> <p>7. “감청”이라 함은 <u>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u></p> <p>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p> <p>8의2.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u>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u>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p> <p>&lt;신설&gt;</p> <p>9.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p> <p>10. “회원제정보서비스”라 함은 특정의 회원이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의 방식을 말한다.</p> <p>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전기통신사실</u>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p> <p>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p> <p>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p> <p>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p> <p>라. 사용도수</p>	<p>5. (현행 6.과 동일)</p> <p>6. “감청”이라 함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대하여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이하 “대화의 감청”이라 한다), 송·수신중인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라 한다)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하 “전기통신의 감청”이라 한다)을 말한다.</p> <p>7. (현행 8.과 동일)</p> <p>8.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u>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u>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p> <p>9. “감청소프트웨어”라 함은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p> <p>10. (현행 9.와 동일)</p> <p>11. (현행 10.와 동일)</p> <p>12.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과거의 전기통신사실</u>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p> <p>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p> <p>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p> <p>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p> <p>라. 사용도수</p>	<p>명히 규정함(개정안 제6호).</p> <p>■ 감청의 개념에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가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개정안 제6호, 제9호)</p> <p>■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과거의 통신사실확인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한정함(개정안 제12호).</p> <p>■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를 ‘가입자정보’로 개념정의하고(개정안 제14호 신설), 이에 대해 형소법상의 일반 압수·수색과 동일한 요건으로 영장주의를 적용함.</p> <p>(※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함께 발의해야 함)</p> <p>■ 현행 제11호 바·사목의 위치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개념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둠(개정안 제15호 신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8.6.28. 선고 2012헌마191, 550, 2014헌마357 병합)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치정보 추적자료에 대해서는 다른 통신사실확인자료보다 영장주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개정안 제24조 참조).</p>
--	---	---

<p>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p> <p><u>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u></p> <p><u>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u></p> <p>12. “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p> <p><u>&lt;제14호 신설&gt;</u></p> <p><u>&lt;제15호 신설&gt;</u></p>	<p>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p> <p><u>&lt;바목 삭제&gt;</u></p> <p><u>&lt;사목 삭제&gt;</u></p> <p>13. (현행 12.와 동일)</p> <p>14. “가입자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관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관한 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u>가. 가입자의 성명</u></p> <p><u>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u></p> <p><u>다. 가입자의 주소</u></p> <p><u>라. 가입자의 전화번호</u></p> <p><u>마. 가입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한 가입자 식별번호를 말한다)</u></p> <p><u>바. 가입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u></p> <p>15. “위치정보추적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p> <p><u>가.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해당 정보통신기기가 이용대기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u></p> <p><u>나.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해당 정보통신기기가 이용대기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u></p>	
<p>※ 전기통신사업법</p> <p>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p>		

<p>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용자의 성명</li> <li>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li> <li>3. 이용자의 주소</li> <li>4. 이용자의 전화번호</li> <li>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li> <li>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li> </ol>		
<p><b>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b>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u>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u>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 (생략)</li> <li>②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u>보충적인 수단으로</u> 이용되어야 하며, <u>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li> <li>③ 누구든지 단말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ol>	<p><b>제4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b>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u>우편물의 검열, 감청을 하거나 가입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서는 아니된다.</u>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 (현행과 동일)</li> <li>②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u>보충적인 최후수단으로</u> 이용되어야 하며, <u>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u></li> <li>③ (현행과 동일)</li> </ol>	<p>■ 제1항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뿐만 아니라 가입자정보와 위치정보추적자료도 명시하고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함.</p> <p>■ 제2항의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최후수단성”을 명시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강화하여 기본권제한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규정함.</p>
<p><b>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b>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p>	<p><b>제5조(증거사용 금지)</b> 제4조를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 또는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 불법적으로 제공된 가입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위치정보추적자료나 그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p>	<p>■ 증거사용 금지의 대상으로 전기통신의 감청뿐만 아니라 대화감청도 포함하고, 가입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위치정보추적자료를 명시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p>

		경우에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의 증거사용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함.
<장제목 신설>	제2장 통신제한조치	
<p><b>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b> ①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p> <p>1.~11. (생략)</p> <p>② 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p> <p>&lt;제3항 신설&gt;</p> <p>&lt;제4항 신설&gt;</p>	<p><b>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b> ①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p> <p>1.~11. (별표 참조)</p> <p>② 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한다.</p> <p>③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수신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기술적으로 특정·분리할 수 있는 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역무 또는 인터넷서비스의 종류·유형을 특정하여야 하며, 그 해당자가 사용하는 인터넷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그와 같은 특정·분리의 조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개별적인 전기통신역무 또는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는 감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p> <p>④ 통신제한조치는 그로부터 해당 범죄의 실행에 관한 증거 또는 범인의 소재를 파악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p>	<p>■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 요건 중에서 “계획” 부분을 삭제하고, 보충성요건을 강화하여 범인의 체포나 증거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요건을 강화함(전해철안과 동일).</p> <p>■ 감청대상범죄에서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제외하여 대상범죄를 축소 조정함(별표 참조).</p> <p>■ 제3항에서 인터넷회선감청(소위 ‘패킷감청’)을 엄격하게 예외적으로만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감청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역무 또는 인터넷서비스의 종류·유형을 특정하도록 하고, 인터넷회선감청은 그러한 기술적 특정·분리조치가 불가능하고 개별적인 감청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엄격하게 한정하도록 함.</p> <p>■ 제4항을 신설하여 개연성 요건을 명시함(전해철안과 동일)</p>
<p><b>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b> ①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p>	<p><b>제7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영장의 청구 및 발부)</b> ①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6조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로 통신제한조치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로 통신제한</p>	<p>■ 개정안 제6조에서 “계획” 부분을 삭제한 것과 상응하여 “피내사자”를 통신제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로지 “피의자”만 대상이 되도록 함(전해철안과 동일).</p> <p>■ ‘허가서’를 ‘영장’으로 변경하여 헌법상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됨을</p>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⑥ 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

조치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영장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피의자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영장의 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업무 또는 인터넷서비스의 종류·유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간·집행장소·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그 피의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로 통신제한조치영장을 발부한다.

⑥ 제5항의 통신제한조치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피의사실의 요지, 죄명, 적용법조,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통신수단,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집행장소·방법·기간 및 그 기간이 경과하면 통신제한조치를 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담당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통신제한조치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하기 위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분명히 하고, 통신제한조치영장을 청구할 때 소명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규정함(전해철안과 동일).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현행 2월에서 1월로 단축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제7항 단서 규정을 삭제함.

■ (참고) 박범계안(2018.12.7.)은 패킷감청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 제2항에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제9조의4를 아래와 같이 신설함.

제9조의4(인터넷회선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특례) ① 제9조의 통신제한조치 중 인터넷회선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하는 자는 대상 기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하여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신제한조치 집행 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제3항의 로그 자료의 기록 및 출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p> <p>⑧ 법원은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p> <p><b>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b>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p> <p>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제6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p>	<p>⑧ (현행과 동일)</p> <p><b>제8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영장의 청구 및 발부)</b>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대상자별로 법원의 통신제한조치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p> <p>&lt;제1호 삭제&gt;</p> <p>&lt;제2호 삭제&gt;</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p> <p>&lt;단서 삭제&gt;</p> <p>③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장 발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제</p>	<p>■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을 강화하고, 영장발부를 지방법원 판사로 통일하도록 규정함.</p> <p>■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1월로 단축함.</p> <p>※ (참고) 서영교안과 이정희안은 요건을 “국가의 존립에 현실적이고 상당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강화하면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바 있음.</p>
---	---	--

<p>“법원”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제5조제1항”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제6조제2항 및 제5항중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한다.</p> <p>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에 관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6조”는 “제8조제1항”으로, “피의자”는 “대상자”로 한다.</p> <p>&lt;제4항 삭제&gt;</p>	
<p><b>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b>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제6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p> <p>③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④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청서(이하 “긴급감청서등”이라 한다)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p> <p>⑤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기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p>	<p><b>제9조(긴급통신제한조치)</b>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6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7조 또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영장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제7조 및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신제한조치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통신제한조치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p> <p>③ (현행과 동일)</p> <p>④ (현행과 동일)</p> <p>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집행중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법원의 감독 하에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를 즉시</p>	<p>■ 긴급통신제한조치는 영장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죄혐의를 전제로 해야 하므로, 제1항 중 “음모행위”를 “범죄행위”로 개정하고, “계획” 부분을 삭제함(개정안 제6조 참조).</p> <p>■ 현행 통비법은 단기간의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하여는 법원의 사후 허가조차 필요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남용의 위험이 매우 큼. 이에 개정안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모든 경우에 36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반드시 발부받도록 규정함(개정안 제2항).</p> <p>■ 그리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취득한 자료를 법원의 감독 하에 즉시 폐기하도록 규정함(개정안 제5항).</p>

<p>를 한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이 이에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지 못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p> <p>⑧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조치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p> <p>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p>	<p>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대상에 기재하여야 한다.</p> <p>&lt;제6항 삭제&gt;</p> <p>&lt;제7항 삭제&gt;</p> <p>&lt;제8항 삭제&gt;</p> <p>&lt;제9항 삭제&gt;</p>	
<p><b>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b> ① 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p>	<p><b>제10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b> 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통신제한조치영장은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p>	<p>■ 허가서를 ‘영장’으로 변경함(전해철안과 동일).</p>

<p>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u>통신제한조치허가서</u>(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u>표지의 사본</u>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u>통신제한조치허가서</u>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u>표지 사본</u>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비치하여야 한다.</p> <p>④ 통신기관등은 <u>통신제한조치허가서</u>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p>	<p>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u>통신제한조치영장</u>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u>사본</u>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u>통신제한조치영장</u>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u>사본</u>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동일)</p> <p>④ 통신기관등은 <u>통신제한조치영장</u>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p>	
<p><b>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b> ① 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p>	<p><b>제11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b>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즉시 당해 통신제한조치의 모든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후 3일 이내에 동일한 피의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을 근거로 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재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영장을 발부받은 때에는 마지막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li> <li>2.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종류·방법</li> <li>3. 통신제한조치를 개시한 일시와 종료한 일시</li> <li>4. 통신제한조치영장을 발부받은 날짜</li> <li>5. 통신제한조치영장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법조</li> <li>6. 당사자의 권리보호수단과 절차에 관한 사항</li> </ol> <p>&lt;제2항 삭제&gt;</p>	<p>■ 헌법재판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관한 통지규정(제13조의3)에 대하여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그 취지는 통신제한조치의 통지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함.</p> <p>■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통지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지시점을 ‘종료 후 즉시’로 변경함(전해철안은 30일 이내로 규정한 바 있음). 다만, 실무상 동일한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최종적인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즉시 통지하도록 단서규정을 둠.</p> <p>■ 통지의 대상을 ‘당해 통신제한조치의 모든 당사자’로 규정함으로써</p>

<p>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p> <p>1.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u>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u></p> <p>2.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p> <p>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u>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u>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u>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u>을 얻어야 한다.</p> <p>⑥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4항 각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p>	<p>&lt;제3항 삭제&gt;</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p> <p>1.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u>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현저한 때</u></p> <p>2.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p> <p>③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u>관할 법원의 허가</u>를 받아야 한다.</p> <p>④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지를 유예한 기간이 종료한 날에 또는 제2항 각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p>	<p>전기통신의 모든 송수신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할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p> <p>■ 통지유예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통지유예의 요건을 축소강화하고,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통지유예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통지제도의 적법절차적 보장을 강화함(개정안 제2항부터 제4항까지).</p>
<p>&lt;신설&gt;</p>	<p><b>제1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b> 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영장을 집행하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지득·채록한 내용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과 관계없는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은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p> <p>②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의 지득 및 그에 관한 녹음이나</p>	<p>■ 사생활에 관한 정보 취득시 즉시 폐기 또는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문서 기록으로 남기도록 규정함(전해철안과 동일).</p>

	그 밖의 기록의 폐기 또는 삭제에 관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문서에 기록·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신설>	<p><b>제13조(통신제한조치의 기록과 봉인 등)</b> 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을 녹음하거나 전자기록으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매체에 기록·저장(이하 “기록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삭제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록등을 중지하여야 한다.</p> <p>③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즉시 제1항에 따른 기록매체를 봉인하여야 한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중에 기록매체를 교체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해당 기록매체에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p> <p>④ 제3항에 따른 기록매체의 봉인은 봉인을 실시한 일시와 장소, 봉인한 사람의 성명이나 그 밖에 봉인한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기재는 봉인과 분리되어서는 아니된다.</p> <p>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매체를 봉인한 때에는 봉인한 기록매체를 지체없이 통신제한조치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집행할 때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특정의 기록매체에 저장하도록 하고, 감청을 종료하면 기록매체를 봉인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감청으로 알게 된 전기통신의 내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통제함.</p>
<신설>	<p><b>제14조(집행종료 후 서면의 제출)</b>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통신제한조치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신제한조치영장 집행의 개시 및 종료의 일시</li> <li>2.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기간 중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등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개시 및 종료의 일시</li> <li>3.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여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li> </ol>	<p>■ 기록매체 저장 및 봉인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p>

	<p>수사기관의 직원의 성명 또는 그 밖에 관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집행의 일시별로 관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p> <p>4.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록매체의 봉인을 실시한 일시와 장소, 봉인에 관여한 자의 성명 또는 그 밖에 관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p> <p>5. 해당 통신제한조치의 근거가 된 적용법조</p> <p>6.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p>	
<신설>	<p><b>제15조(기록매체의 보관등)</b> ① 법원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매체를 법원 내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명해야 한다.</p> <p>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제한조치의 근거가 된 범죄혐의의 수사 또는 제8조제1항의 국가의 존립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에 기록매체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정하여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라 보관되는 기록매체는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법원은 기록매체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5조에 기재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기록매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 봉인하여 법원에 제출된 기록매체 원본을 법원이 보관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신청하여 수사상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용의 여지를 최소화 함.</p> <p>■ 봉인한 기록매체 원본은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기록매체 원본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p>
<신설>	<p><b>제16조(당사자의 권리보호)</b> ① 제11조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기록매체의 보관을 명한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를 청구한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수소법원이 심사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한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보관을 명한 기록매체에 대하여 법원에 그 기록의 청취·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심사 청구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청취·열람 또는 복사</p>	<p>■ 통신제한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당사자의 심사청구권 및 기록매체에 대한 열람·복사권을 보장함.</p>

	<p>를 허가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p>	
<p><b>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b> ①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외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법원에서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허가여부·허가내용 등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b>제17조(비밀준수의 의무)</b> (현행과 동일)</p>	
<p><b>제1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b>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p> <p>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p> <p>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p> <p>4.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p>	<p><b>제18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b>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6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p> <p>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p> <p>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p> <p>4.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p>	<p>■ 제1호에서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범위와 요건이 불분명하고 남용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삭제함.</p>
<p><b>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b>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p> <p>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p>	<p><b>제19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b>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p> <p>②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p>	<p>■ 대화감청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현행법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함. 다만, 준용규정을 정비함.</p>

<p>&lt;장제목 신설&gt;</p>	<p><b>제3장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b></p>	
<p><b>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b> ①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사법경찰관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b>제20조(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b>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피의자 및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li> <li>2.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종류와 기간, 전기통신의 송·수신 당사자의 성명 또는 그 밖에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li> <li>3.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날짜와 유효기간</li> <li>4.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법조</li> </ol>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을 종료한 즉시 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할 경우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p> <p>③ 제11조 제3항과 제4항, 제16조 제1항을 준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관한 통지규정(제13조의3)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전기통신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에도 반영함.</li> <li>■ 통지의 상대방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뿐만 아니라, 해당 전기통신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로 규정함.</li> <li>■ 통지의 시기는 통신제한조치와 마찬가지로 “집행종료 후 즉시”하도록 규정함. 통지유예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유예기간도 30일 이내로 제한함.</li> <li>■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제16조 제1항을 준용함.</li> </ul>
<p>&lt;장제목 신설&gt;</p>	<p><b>제4장 가입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등</b></p>	
<p>&lt;신설&gt;</p> <p>※ 전기통신사업법</p> <p><b>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b>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죄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용자의 성명</li> <li>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li> <li>3. 이용자의 주소</li> </ol>	<p><b>제21조(범죄수사를 위한 가입자정보의 제공)</b>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가입자정보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가입자정보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가입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해당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가입자정보의 제공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해당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는 소명자료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가입자정보제공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하여 가입자정보제공영장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③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정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의 통제없이 통신자료(가입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법절차 위반의 문제가 있음.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를 ‘가입자정보’로 개념정의하고(개정안 제2조 제13호), 가입자정보의 제공에 대해 통비법에서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규율하도록 함.</li> <li>■ 가입자정보 제공의 요건은 형소법상의 일반 압수·수색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함.</li> </ul>

<p>4. 이용자의 전화번호</p> <p>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p> <p>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p> <p>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p> <p>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⑧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⑨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공영장을 발부한다.</p> <p>④ 제3항의 가입자정보제공영장에는 피의자 또는 형집행을 요하는 자의 성명, 피의사실 또는 형집행을 요하는 사실의 요지, 죄명, 적용법조, 가입자정보제공의 대상이 된 통신수단, 영장집행의 기간, 그 기간이 경과하면 가입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담당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가입자정보제공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⑤ 가입자정보제공영장을 집행하는 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통신기관등에 가입자정보제공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입자정보의 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가입자정보의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가입자정보제공영장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p> <p>⑦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정보제공영장의 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발부한 현황 및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p> <p>⑧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가입자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가입자정보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가입자정보제공영장의 사본등 관련자료를 가입자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등 관련 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p>	
<p><b>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b>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b>제22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b>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p>	<p>■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내용정보 못지않게 통신비밀의 침해가 매</p>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등 관련 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⑨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

른 수사방법으로는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열거된 범죄 중 어느 하나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를 위하거나 피의자로부터 특정한 통지를 받거나 전달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자 또는 피의자가 그의 전기통신 계정을 이용한 것이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에 관한 소명자료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영장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영장을 발부한다.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집 범위를 해당 범죄사건의 수사의 필요성과 중대성이 비추어 적절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⑥ 제21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영장의 발부 및 집행에 준용한다.

우 큰 민감정보라는 점을 논거로 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대상 범죄를 감청대상범죄와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저지른 범죄로 한정함.

■ 제공의 요건도 감청 요건에 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적법절차 통제를 강화함.

<p>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동조제7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b>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b>제23조(법원에의 가입자정보제공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①</b>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43조부터 제3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b>②</b> 형사재판의 경우에 법원은 제21조 제1항의 요건에 따라 가입자정보제공영장을 발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정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제4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p> <p><b>③</b> 형사재판의 경우에 법원은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영장을 발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제2항, 제5항, 제21조 제4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의 민사재판에서는 민소법상 문서제출명령제도에 의하도록 함.</li> <li>■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제21조 제1항의 요건(가입자정보의 경우) 또는 제22조 제1항 각호의 요건(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을 충족하는 전제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가입자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li> </ul>
<p>&lt;신설&gt;</p>	<p><b>제24조(범죄수사를 위한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 ①</b> 검사는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용대기상태에서의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은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 한한다.</p> <p>1. ~ 00호 (감청대상보다 범위 축소, 별표 참조)</p> <p><b>②</b>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b>③</b>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래 또는 실시간의 위치정보추적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청대상범죄보다 대상범죄를 축소함.</li> <li>■ 보충성 요건(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은 감청과 동일하게 적용함.</li> <li>■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는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기간을 원칙적으로 10일로 제한(단, 1일씩 2회 연장 가능)</li> </ul>

	<p>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이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한하며, 이때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 기간 중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요청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문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2회에 한하여 각 10일의 범위 안에서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p> <p>④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의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p>	
<p>&lt;신설&gt;</p>	<p><b>제25조(특정 전기통신 기지국에서 생성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b> ① 검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 중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범죄가 연속적으로 여러 건 발생하였거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동일 사건의 단서가 여러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발견된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특정 기지국에서 생성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검사는 특정 기지국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일시와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p> <p>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특정 기지국에서 생성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법원은 특정 전기통신 기지국에서 생성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집 범위를 해당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중대성이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p> <p>④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특정 전기통신 기지국에서 생성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p>	<p>■ 기지국수사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고 그 요건을 강화함. 대상범죄를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한정하고, 연쇄범죄 발생 등의 특수한 상황요건을 규정하며, 보충성요건도 규정하여 기지국수사에 대하여 엄격한 통제를 규정함.</p>

<p><b>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b></p> <p>①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u>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u>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의2제3항·제4항·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본다.</p> <p>③ 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b>제26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의 절차 등)</b></p> <p>①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u>가입자정보의 제공</u>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정보 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u>통신사실확인자료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u>(이하 본조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장래 또는 실시간의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한하며, 이때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 기간 중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요청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문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2회에 한하여 각 10일의 범위 안에서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 제3항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제21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가입자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현행 통비법 제13조의4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절차적 통제를 강화함.</p> <p>■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에 관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과 유사한 요건으로 강화하고, 영장주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절차적 통제를 강화함.</p>
<p><b>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b>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b>제27조(범죄수사를 위한 가입자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의 통지)</b>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1조, 제22조 또는 제24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받은 즉시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해당 영장에 기재된 죄명 및 구체적인 혐의의 내용,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해당 통신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p>	<p>■ 가입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의 경우에도 자료수집후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함.</p>

<p>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동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지하여야 한다.</p> <p>② 통지의 유예 및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해서는 제1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b>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p>	<p><b>제28조(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b> 제17조 및 제18조는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정보 제공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와 해당 정보 또는 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p>	
<p>&lt;장제목 신설&gt;</p>	<p><b>제5장 감청설비의 인가 등</b></p>	
<p><b>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b> 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삭제 &lt;2004. 1. 29.&gt;</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자,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인가를 받아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비치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품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제공되는 감청설비는 해당 기관의 비품대장에 기재한다.</p> <p>⑤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29조(감청설비등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b> ① 감청설비 또는 감청소프트웨어(이하 “감청설비등”이라 한다)를 제조·제작·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자,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등의 종류와 수량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인가를 받아 감청설비등을 제조·제작·수입·판매·배포·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등의 종류와 수량, 비치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품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제공되는 감청설비등은 해당 기관의 비품대장에 기재한다.</p> <p>④ (현행과 동일)</p>	<p>■ 감청설비뿐만 아니라 감청소프트웨어도 인가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함.</p>
<p><b>제10조의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b> ① 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을 제외한다)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b>제30조(국가기관 감청설비등의 허가)</b> ① 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감청설비등을 도입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등을 변경(감청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등의 기술적 보완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p>	<p>■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등을 도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변경(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등을 포함), 폐기하는 경우도 함께 규율함.</p> <p>■ 국가기관의 감청설비등의 도입에</p>

<p>② 정보수사기관이 <u>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u>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lt;제2문 추가&gt;</p>	<p><u>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해당 감청설비등의 변경 또는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u></p> <p>② 정보수사기관이 <u>감청설비등을 도입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u>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u>국회 정보위원회가 감청설비등의 변경 또는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정보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u></p>	<p>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통제를 강화함.</p> <p>■ 감청설비등의 도입·변경·폐기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p>
<p><b>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b> ①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법인에 한하여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용자보호계획·사업계획·기술·재정능력·탐지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변경요건 및 절차, 등록한 사업의 양도·양수·승계·휴지·폐지 및 그 신고, 등록업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31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b> (현행과 동일)</p>	
<p><b>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b>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제10조의3</u>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p> <p>1. ~ 5. (생략)</p> <p>6. <u>제10조의5</u>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u>제10조의4제1호</u>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법인의 취소 당시 대표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b>제32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b>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제31조</u>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p> <p>1. ~ 5. (현행과 동일)</p> <p>6. <u>제33조</u>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u>제32조제1호</u>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법인의 취소 당시 대표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b>제10조의5(등록의 취소)</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b>제33조(등록의 취소)</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1. (생략) 2.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 6. (생략)	1. (현행과 동일)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 6. (현행과 동일)	
<장제목 신설>	제6장 국회의 통제 등	
<b>제15조(국회의 통제)</b> ①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u>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내역</u> 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그 의결로 수사관서의 <u>감청장비보유현황</u> , 감청집행기관 또는 감청협조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검증이나 조사에 참여한 자는 그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증이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내지 제10조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b>제34조(국회의 통제)</b> ①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u>감청설비등에 대한 인가 또는 허가·신고내역</u> 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그 의결로 수사관서의 <u>감청장비등 보유현황</u> , 감청집행기관 또는 감청협조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검증이나 조사에 참여한 자는 그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현행과 동일)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 및 가입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이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등은 매 분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보고서, 가입자정보제공보고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보고서 및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현행 통비법 제15조 제4항은 국회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 통제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로’ 보고서제출 및 공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함(전해철안과 동일).
<신설>	<b>제35조(정보인권 투명성보고서)</b> ① 전기통신사업자등은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인권 투명성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 가입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협조하거나 관여하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연2회 투명성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발간하도록 규정함(전해철안과 동일).

	<p>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현황</p> <p>2. 개인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 현황</p> <p>3. 이용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자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신청한 현황 및 그 요청에 응하여 행한 조치 현황 등 개인정보처리 현황</p> <p>② 제1항에 따른 투명성 보고서는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수록할 사항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b>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lt;제3항 신설&gt;</p>	<p><b>제36조(전기통신사업자등의 협조의무)</b> ① 전기통신사업자등은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가입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등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위치정보추적자료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p>	<p>■ 현행 통비법 제15조의2 및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의무보관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p>
<p>&lt;장제목 신설&gt;</p> <p><b>제16조(벌칙)</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p> <p>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p> <p>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p>	<p><b>제7장 벌칙</b></p> <p><b>제37조(벌칙)</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p> <p>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이나 대화에 대한 감청을 한 자</p> <p>2. (현행과 동일)</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영장 또는 긴</p>	

<p>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u>통신제한조치허가서</u>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p> <p>2. 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p> <p>&lt;신설&gt;</p> <p>③ 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④ 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급감청서등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u>통신제한조치영장</u>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p> <p>2. 제17조제1항(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p> <p>3. 제21조제5항의 규정(제22조제6항,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가입자정보제공영장,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영장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가입자정보제공영장,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영장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영장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자료를 제공한 자</p> <p>③ 제17조제2항(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④ 제17조제3항(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b>제17조(벌칙)</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u>통신제한조치허가서</u>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p> <p>2. 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p> <p>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u>통신제한조치허가서</u>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p>	<p><b>제38조(벌칙)</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u>통신제한조치영장</u>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p> <p>2. 제10조제3항(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p> <p>3.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u>통신제한조치영장</u>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p>	

<p>&lt;신설&gt;</p>		
	<p>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에 관한 녹음 또는 그 밖의 기록을 즉시 삭제 또는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삭제·폐기에 관한 기록·편철을 하지 아니한 자</p>	
<p>&lt;신설&gt;</p>	<p>5.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록매체에 기록·저장하지 아니한 자</p>	
<p>&lt;신설&gt;</p>	<p>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기록등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p>	
<p>&lt;신설&gt;</p>	<p>7.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록매체를 봉인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봉인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봉인된 기록매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p>	<p>8.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등을 제조·제작·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p>	
<p>5.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p>	<p>9.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설비등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p>	
<p>&lt;신설&gt;</p>	<p>10.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설비등을 허가없이 도입하거나, 그 변경 또는 폐기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국가기관의 장</p>	
<p>&lt;신설&gt;</p>	<p>11.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설비등의 도입·변경 또는 폐기에 관한 사실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통보한 정보수사기관의 장</p>	
<p>&lt;신설&gt;</p>	<p>12.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증빙자료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국가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p>	
<p>5의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 자</p>	<p>13.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 자</p>	
<p>6. 삭제 &lt;2018. 3. 20.&gt;</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p> <p>2. 제8조제2항 후단 또는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u>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u></p> <p>3. 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p> <p>&lt;신설&gt;</p> <p>4.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u>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u>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1.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p> <p>2.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u>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감독 하에 자료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감독 없이 임의로 자료를 폐기한 자</u></p> <p>3. 제11조(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p> <p>4.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p> <p>5. 제21조제8항(제22조제6항,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4,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u>가입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 현황</u>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p> <p>6.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p> <p>7.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p> <p>8.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u>토명성보고서를 발간하지 아니한 자</u></p>	
--	--	--

##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대상범죄

<b>현행 통비법상 감청대상범죄 (제5조 제1항)</b>	<b>개정안 제6조 제1항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대상범죄</b>	<b>개정안 제24조 제1항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 및 기지국수사의 대상범죄</b>
<p>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p> <p>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제 172조 내지 제173조·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 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 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p>	<p>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del>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del>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u>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중 제146조부터 제151조</u> <u>까지의 죄,</u>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제 172조 내지 제173조·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 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 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p>	<p>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del>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del>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del>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del> 내지 제133조의 죄, <del>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중 제146조부터 제151조</del> <del>까지의 죄,</del>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제 172조 내지 제173조·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del>제18장 통화에 관한 죄,</del> <del>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del>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 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 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p>

<p>(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3조의 죄</p> <p>2. 균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제80조·제81조의 죄</p> <p>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p>	<p>(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 제342조[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3조의 죄</p> <p>2. 균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중 제47조의 죄, 제9장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제80조·제81조의 죄</p> <p>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제4조, 제8조의 죄</p>	<p>(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 제342조[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3조의 죄</p> <p>2. 균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중 제47조의 죄, 제9장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제80조·제81조의 죄</p> <p>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제4조, 제8조의 죄</p>
---	--	--

<p>4. <u>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u></p> <p>5. 「<u>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u>」에 규정된 범죄</p> <p>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p> <p>7.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p> <p>8. 「<u>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에 규정된 범죄 중 제70조 및 제7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p> <p>9. 「<u>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u>」에 규정된 범죄 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죄</p> <p>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p> <p>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p>	<p>4. <u>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7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u></p> <p>5. 「<u>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u>」에 규정된 범죄 중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의 죄</p> <p>6. (현행과 동일)</p> <p>7. (현행과 동일)</p> <p>8. (현행과 동일)</p> <p>9. 「<u>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u>」에 규정된 범죄 중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의2부터 제5조의9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 죄</p> <p>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p> <p>11. (현행과 동일)</p>	<p>4. <u>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7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u></p> <p>5. 「<u>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u>」에 규정된 범죄 중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의 죄</p> <p>6. (현행과 동일)</p> <p>7. (현행과 동일)</p> <p>8. (현행과 동일)</p> <p>9. 「<u>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u>」에 규정된 범죄 중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11조의 죄</p> <p>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4조의 죄</p> <p>11. (현행과 동일)</p>
---	--	--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결 정

제 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통신제한조치 연장과 관련하여, 위 개정법률안 제6조 제7항에서 통신제한 조치의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를 축소 및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위 개정법률안 제13조 제1항에 대상범죄 및 대상자 한정,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 등 자료제공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위 개정법률안 제13조 제2항에 대상범죄 및 대상자 한정,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 등 자료제공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기지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위 개정법률안 제13조 제3항에 대상범죄 명시,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 등 자료제공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5.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지와 관련하여, 요청사유 등 통지사항 명문화, 통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공소제기 등 수사상 보안유지 필요사유 소멸 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사실에 대한 즉시통지, 통지유예 기간 규정 및 법원 등 객관적·중립적 기관의 허가,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유예사유 명시 등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유

### I. 의견표명의 배경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결정에서 통신제한조치 기간과 연장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또한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결정과 2012헌마191 결정에서는 각각 ‘기지국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제공’에 대하여, 같은 해 8. 30. 선고 2016헌마263 결정에서는 ‘인터넷회선 감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개선입법 시한을 2020. 3. 31.로 정하였고, 이후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 개정법률안’이라 한다)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정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및 이에 대한

통지',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수사 편의성과 법 집행의 효율성만 우선하여 여전히 상당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부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법률 개정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 II. 판단 기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37조 제2항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결정,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등 결정,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결정,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2014. 2. 10.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 개선 권고” 등을 참고하였다.

## III. 판단

### 1. 우리나라 정보환경의 특수성

#### 가. 주민등록번호 제도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선진국과 달리 고유한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전 국민에게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각 개인에게 고유하게 부여되며(유일성), 범죄악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변하지 않기 때문에(불변성) 특

정 개인에 대한 식별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과거에는 주민관리를 위한 식별 및 인증에 활용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정보환경의 발달, 전자정부 도입 등에 따라 식별 및 인증기능에 그치지 않고, 다른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핵심 연결자(Primary Key)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환경의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키 데이터(Key Data)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 재식별 및 침해·유출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을 통해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활용하게 된다면, 범죄수사 이외에 특정인에 대한 사찰과 같이 개인에 대하여 포괄적인 추적, 감시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 나.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을 통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기본권 침해 및 이를 적절히 제한할 통제수단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또는 ID 수 기준으로 240,571건, 문서 수 기준으로 132,137건이며, 전년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5,994건(2017년 2,860,836건→2018년 2,956,830건), 문서 수 기준으로 5,428건(2017년 473,145건→2018년 478,573건)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는 미흡한 수준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여러 결정을 통

해서 확인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절차 남용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결정,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공요청 남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2010. 6. 28. 선고 2012헌마 191 결정 등이 그것이다.

#### 다.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메타데이터에 대한 전통적 견해의 변화

우리나라 정보통신 환경에서 통상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내용정보와 달리 메타데이터(Metadata)<sup>1)</sup>의 한 종류로 분류하여, 감청 등을 통한 통신내용정보 수집보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적다고 보았다.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는 대상범죄를 제한하는 등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대상범죄 제한 없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필요한 경우”라는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는 등 완화된 요건으로 규율하였다.

그러나 빅데이터(Big Data) 분석기법 도입 등 정보환경 변화로 통신내용정보와 메타데이터 간 보호가치 차이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유럽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이 통신내용정보 수집보다 기본권 침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

유럽 인권재판소는 2018년 Big Brother Watch And Others v. The United

---

1) 고영만(2005), “메타데이터 표준화와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국회도서관보 42(11), ‘메타데이터(Metadata)’는 정보자원의 속성들을 기술하는 데이터로서, ‘데이터의 데이터’로 간략하게 정의되며, 내용에 관한 사항, 다른 정보자원과의 관계, 정보자원의 지적 특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Kingdom 사건에서, 오늘날 메타데이터는 소셜 네트워크의 매핑(Mapping), 위치 추적, 인터넷 검색 추적 등을 포함하여 특정인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통신내용정보와 메타데이터 간의 임의적 또는 부적절한 구분에 근거해 데이터에 대한 보호 수준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2016년 Tele2 Sverige AB v. Post-och telestyrelsen 및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v. Tom Watson and Others 사건에서, 생활 습관, 일상적인 움직임 등의 메타데이터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매우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실제 통신 내용에 비해 결코 덜 민감하지 않은 정보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메타데이터 수집에 의한 기본권 침해 수준에 관한 변화된 시각에 따르면, 과거와 같은 형태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대해 낮은 수준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라. 소결

개인정보에 대한 연결자 역할을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 국내 정보환경의 특수한 상황과, 빅데이터(Big Data) 분석기법 도입 등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메타데이터 보호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등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별 제도를 중심으로 정부 개정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 2. 정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가. 통신제한조치 총연장기간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통신의 비밀보호에 비추어 인정되는 불감청수사원칙의 예외로 설정된 기간으로,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예외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결정에서 감청 당시에 개인이 감청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의 사실을 고지받고 시행되는 압수·수색의 경우보다 오히려 그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크며,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예외에 대하여 다시금 특례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되므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개정법률안 제6조 제8항은, 통신제한조치를 연장하는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내란·외환의 죄 등 범죄에 대하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에 대해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통신제한조치 연장기간으로 원칙적 1년, 예외적 3년을 규정한 것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과도하여,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결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미국은 일반적인 수사감청 기간을 최대 30일로 규정하면서,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되, 안보감청에 대해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독일은 감청명령의 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로 하되, 수사결과를 고려하여 감청명령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복적인 연장을 허용한다.

정부 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개정안들과 비교해 볼 때도, 정부 개정법률안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안<sup>2)</sup>은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30일로 하되 30일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안<sup>3)</sup>은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되, 연장횟수를 1회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정부 개정법률안 제6조 제7항과 제8항은 통신제한 조치 기간의 연장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도한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여전히 헌법 제17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의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정부 개정법률안 제6조 제7항 및 제8항은 총연장기간을 보다 짧은 기간으로 단축하거나 또는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이 총연장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등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결정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비내용적 정보기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 통신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시 엄격한 요건 하에

---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682)

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166)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기지국수사와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 개정법률안에는 전혀 개선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말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압수·수색 요건인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도, 지나치게 완화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유럽 인권재판소,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따른 정보주체 기본권 침해 문제와 이를 통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를 다른 수사방법으로는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 12. 28.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g조는 수사기관의 통신데이터 수집 시 「전기통신법」 제113b조4)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통신데이

---

4) 개정된 독일 「전기통신법(TKG)」 제113b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 이용자의 착·발신 전화번호, 통화일시, 인터넷이용자의 IP 주소 등 일부 트래픽 데이터를 10주간 보관해야 하며, 통신기기의 위치정보는 더욱 엄격하여 의무보관기간을 4주로 제한하고 있다.

터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통신데이터 수집이 허용되는 대상 범죄를 감청 대상범죄보다 더욱 한정하고 있으며<sup>5)</sup>, 보충성 요건으로 “사실관계의 조사 또는 피의자의 소재지 조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통신데이터 수집대상자도 “피의자, 또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피의자를 위하거나 피의자로부터 특정한 통지를 받거나 전달한다고 추정되는 자 또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피의자가 그의 전기통신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통신비밀보호법」과 달리 피의자 이외 피해자, 참고인, 증인 등으로 대상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 즉,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제도가 예외적·보충적 수사방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상범죄 및 대상자 한정,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사건과의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있어 같은 법 제5조 제1호에서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대상범죄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사실관계의

5) 통신 감청에 관한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a조 제2항과 제100g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비교하면, 통신데이터 수집이 허용되는 대상범죄를 더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0a조 제2항 : 통신 감청	제100g조 제2항 : 통신데이터 수집
대상 범죄	1. 형법 a) 평화교란, 내란, 민주적 법치국가 위협, 간첩, 외환의 범죄 b) 의원 수뢰와 증뢰 c) 국가방위에 대한 범죄 d) 공공질서에 대한 범죄 e) 화폐위조 및 유가증권위조 f)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범죄 g)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의 반포, 취득, 소지 h) 모살과 고살...(중략)... u) 수뢰와 증뢰	1. 형법 a) 내란, 민주적 법치국가 위협, 간첩, 외환의 범죄 b) 특히 중대한 평화과괴, 범죄단체 조직, 테러 단체 조직 c)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범죄 d)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의 반포, 취득, 소지 e) 모살과 고살 ...(중략)... h) 공동체 위협 범죄

조사 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대상자 범위에 제한이 없어 통신사실확인자료 대상범위가 피의자·피내사자뿐만 아니라 관련자까지 무한히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독일 「형사소송법」 사례를 참고하여 피의자, 계정소유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증인, 참고인, 피해자 등으로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 다.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등 결정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일환으로 행해지는 이동전화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측면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을 요건으로 하면서 수사의 필요성만 있고 보충성이 없는 경우에도, 피의자·피내사자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광범위하게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을 허용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았다.

정부 개정법률안 제13조 제2항은 수사를 위하여 위치정보 추적자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항 단서는 과거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요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별도의 보충성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는바,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관련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한 상황에서 또다시 단서 규정을 통해 제13조 제1항의 적용을 받도록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하위개념인 위치정보 역시 앞서 살펴본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일한 맥락에서 그 제공요건에 대하여 검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격상을 추론할 수 있는데, 위치정보 등이 결합하면 그러한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위치정보는 시간적 경과와 더불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동적(動的)정보로, 정보주체가 특정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위치정보 추적자료 분석을 통해 특정 시간대의 정보주체의 위치 및 이동상황을 알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주체의 예상경로 및 이동목적지 등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치정보 추적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될 여지가 매우 높으므로, 헌법재판소가 밝힌 것과 같이 위치정보는 “민감한 정보”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 수준으로 엄격하게 한정함과 더불어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사건과의 관련성을 소명하도록 하고, 보충성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충성 요건은 “다른 방법으로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제한적인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범죄와 관련해서는 살인, 성폭력, 납치 등 강력범죄 및 연쇄범죄 등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수사상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기지국수사는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에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연쇄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동일 사건의 단서가 여러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발견된 경우에, 사건발생 지역의 기지국에서 착·발신된 전화번호 및 통신내용 정보를 추적·비교분석함으로써 용의자 범위를 좁혀나가는 수사기법이다.

기지국수사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특정 기지국의 특정 시간대에 착·발신된 휴대전화 번호, 통화시각 등 통신사실 정보를 일괄 수집하는 것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수많은 개인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일괄 수집하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받는 당사자 범위가 다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기지국수사와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정부 개정법률안 제13조 제3항은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요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수사의 필요성 외 보충성 요건을 추가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개정법률안 제13조 제3항은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3항의 적용을 받는 범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범죄 이외 모든 범죄가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대상범죄가 될 위험이 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제13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기지국수사와 관련된 별도 조항을 신설한 상황에서 기지국수사가 필요한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대

해 다시 제1항의 적용을 받도록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2005년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g조는 기지국수사에 관한 별도의 수권조항을 신설하면서 대상범죄를 엄격하게 한정함은 물론, 사건관련성을 요구하고, 보충성 요건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 「형사소송법」은 기지국수사에 대해 “개별사건으로도 중대한 의미가 있는 범죄(제100g조 제1항 제1문 제1호)의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 하며, “그 데이터의 수집이 사건의 죄질에 비추어 적절한 관련성이 있는 때”에 한하며, “사실관계의 조사 또는 피의자의 소재지 조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향은 앞서 살펴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요건 강화를 바탕으로 하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본권 침해가 폭넓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지국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대상범죄도 중대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소명하도록 하며, 보충성 측면에서도 수사목적상 이를 허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만 허용하는 등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 마.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지제도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로부터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 의견 및 자료제출 기회 부여와 같은 중요한 절차적 요청이 도출된다. 통지제도는 국가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적기에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에 기여한

다.

정부 개정법률안 제13조의3 제1항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함을 규정하면서, 통지기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은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소중지결정·참고인중지결정 처분을 한 경우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통지유예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사유, 영장에 기재된 죄명 및 적용 법조와 같은 통지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통지의무 위반 시 이를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이를 통해 통지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또한 정부 개정법률안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소중지결정·참고인중지결정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면서, 기소중지결정·참고인중지결정 처분을 한 경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관련 범죄가 제6조 제8항에 따른 범죄일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했는바, 이는 공소제기 등을 통해 보안유지 필요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통지의 지체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정부 개정법률안 제13조의3 제2항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지와 관련하여 유예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된 유예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를 악용할 경우 사실상

무기한 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유예결정 권한이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주어져 있어 이와 같은 형태로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 적절히 통제하기가 어렵다.

한편, 유예사유로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4항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유예사유로 “국가·공공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규정한 것에 비해 상당히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포괄적 측면이 있어 제도 남용이 우려된다.

이에 통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사유 등 통지사항 명문화, 통지의무 위반 수사기관 대상 제재규정 마련, 통지기간 단축, 유예제도 결정 권한·기간·사유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지 내용에는 요청사유, 영장에 기재된 죄명 및 적용법조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개정안들을 살펴보다도,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안<sup>6)</sup>의 경우 통신자료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영장에 기재된 죄명 및 구체적 혐의내용,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안<sup>7)</sup>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요청사유, 법적근거 등을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6)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57)

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420)

수사기관의 통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조치 집행 통지의무를 위반한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재조항과 같이,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지기간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 측면을 고려하면, 공소제기 등 보안유지 필요사유 소멸 시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해당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5항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불가침성, 개인적 자유와 중대한 재산가치 등을 위협하지 않는 한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중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안<sup>8)</sup> 역시 즉시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통지유예와 관련하여, 적정한 통지유예 기간을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의 유예가 필요한 경우 법원 등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유예사유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이유로 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거나, 그 중요성과 심각성이 큰 경우를 선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통지유예 결정 권한과 관련하여, 정부 개정법률안 제13조의3 제3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같은 객관적·중립적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01a조 제6항 제2문은 통지 유보는

---

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499)

관할법원 명령에 따르도록 하고, 통지유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 법원이 지정한 기간에 따라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9. 7. 22.

위 원 장 최 영 애

위 원 정 상 환

위 원 최 혜 리

위 원 정 문 자

위 원 한 수 응

위 원 배 복 주

위 원 임 성 택

위 원 김 민 호

위 원 문 순 회



## 메모

---

## 메모

---

## 메모

---